

#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와 제주의 남북협력 2.0 전략

## - ‘평화의 문’ 을 여는 마중물 역할 찾기 -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기획자 註]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으나,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북한 9차 당대회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타민 C 외교’ 등을 통해 남북 협력에 적극 관여해 온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ipark@jpi.or.kr](mailto:dipark@jpi.or.kr))].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초록

2026년 남북관계는 대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비관론’ 속에서, 마치 ‘바늘구멍 찾기’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선제적·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관계 복원의 기본인 소통과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와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으며, 기존의 대남 노선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규정하며, 향후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이라는 틀이 아닌 철저히 ‘국익’ 중심의 적대적 관점에서 다룰 것임을 선언했다. 대남 실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장의 승진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국경선 요새화는 물론 안전 위협 시 선제공격을 포함한 물리력 사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입각하여 남북의 물리적 차단, 민족·통일 상징물 제거, 나아가 관련 역사의 부정이라는 ‘3중의 단절’을 통해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 차원의 대화 가능성은 안갯속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직된 정세 속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의 순환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 협력을 준비 중이다. 과거 2000년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며 ‘비타민C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던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꼭 막힌 남북관계에서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열리는 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제주는 냉혹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담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인 '감귤 지원' 방식을 넘어선 '감귤 협력 2.0'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지방 발전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만의 특화된 환경, 에너지, 관광, 모빌리티를 결합한 '복합 협력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제주는 이제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 새로운 남북 협력의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실험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들어가는 글

2026년 한반도는 북한의 내부 제도 정비와 외부의 지정학적 격량이 맞물린 중차대한 시점에서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의 외교·군사력이 중동에 집중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은 물론이고 한반도에도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은 세계 경제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으며 그간 폐쇄적이었던 북한 경제에도 서서히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중동 분쟁이 가져오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한반도 정세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북한은 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김정은 시대'를 제도적·조직적으로 공고히 했다. 동시에 대남 관계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관'을 고착화하며 한반도에 단절의 시대를 열어가려 하고 있다.<sup>1)</sup>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통해 긴장과 경색의 남북한관계를 타개하려는 평화적 조치를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관계 복원의 기본인 소통과 대화가 단절된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 단체의 유연한 접근이 중앙정부 차원의 경색을 돌파할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2000년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선도하여 '비타민C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던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전략으로 꽉 막힌 남북 관계의 숨통을 튼튼 주체적 역할을 차분하고 내실있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1) 정성장,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세종 브리프』 NO 2026-13 (세종연구소, 2026. 3. 16), p. 2.

## 제9차 당대회와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실체

북한은 9차 당대회(2월 19~25일)와 바로 이어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회의(3월 22~23일)를 통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은 유일체제를 공고히 하며 ‘해방 후 75년과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시대’를 천명했다.<sup>2)</sup> 경제 부문에서는 향후 5년간 농업 및 식량 증산, 건설 및 지방 발전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도약에 방점을 두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였던 대남 노선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무시하면서 다룰 것”이라고 언급하며 교류나 평화공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남북관계를 민족이 아닌 ‘국익’ 중심의 적대적 관점에서 다룰 것을 지시하며 남북국경선 요새화와 선제공격을 포함한 물리적 무력 사용을 경고했다. 이는 남북의 물리적 차단, 민족·통일상징의 제거, 역사 인식의 부정이라는 ‘3중의 단절’로 남북관계를 구조적 분리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다.<sup>3)</sup>

그러나 북한은 ‘사탕도 총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듯 국방력 증강 못지않게 경제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sup>4)</sup> 남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적인 유가 상승은 북한의 민생 경제에도 타격을 주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가 절실해질 것이다. 북한이 언급한 ‘국익에 준한 냉정한 계산’이라는 표현처럼, 한국 정부는 외면하더라도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실용적 경제 협력 공간은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김정일 시대 vs 김정은 시대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인식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 관계의 본질:

김정일 시대에는 남북을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남한을 파트너로 대우했다. 당시 제주의 감귤 지원은 ‘민족의 진정성’ 상징이었다.<sup>5)</sup> 반면, 김정은 시대는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했다.

2) 황수환,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교류협력 방향,”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주최 콜로키움 발표문(2026. 3. 27.), pp. 3-4.

3) 임을출, “국제 전기차 엑스포 성사를 위한 전략적 환경 분석과 과제,” 세계전기차협의회 주최 2027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PIEVE) 추진 세미나 발표문(2026. 1. 13.), pp. 4-5.

4) 이일규, “북한 9차 당대회로 본 ‘사탕과 총알’의 이중 전략,” 『조선일보』 2026. 3. 22.

5) 2000년대의 감귤북한보내기 운동은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평화의 감귤, 한라에서 백두까지 1999-2009」(2009) 참고.

- **목적과 인식:**

과거에는 체제 생존 및 경제적 실리를 위해 남측의 자본(금강산, 개성공단)을 활용했다. 그러나 현 체제는 교류를 '체제 오염의 통로'로 인식하며, 남한의 지원을 "독약 발린 사탕"에 비유할 정도로 경계한다.<sup>6)</sup> K-컬처의 유입에 대한 두려움이 남한을 철저한 '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 **시사점:**

제주의 제안이 과거의 패턴(일방적 지원)을 반복한다면 '정치적 행위'로 간주되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제주의 전략은 명분이 아니라 실용, 지원이 아닌 공동 이익의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과 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준비 동향

-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삼고, 바늘구멍 같은 여지라도 찾기 위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1조 원대로 회복하여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경제협력에 유연하게 집행할 상시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독점하던 교류의 창구를 지자체로 분산하며 제도적·예산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타 지자체의 대북협력 준비:**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남북신뢰 구축 사업의 실험장'으로 삼고 보건의로 방역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2026년은 국제평화회의를 통한 국제교류와 도내 평화교육 사업 실시로 지지 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sup>7)</sup> 도내 시군 공모를 거쳐 경기도 평화 경제특구 전략 후보지로 연천, 파주, 포천을 선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정부 지정 신청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춘천, 속초, 철원, 고성, 화천 등 접경지역을 권역별로 특화 개발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을 추진 중이며 교류협력 개발을 위해 일부 조례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sup>8)</sup>

6) 김지은, “北 “해외원조, 독약 발린 사탕…원조 구실로 체제 변경 요구,” 『뉴시스』 2023. 02. 22.

7) 김미지, “남북관계 신뢰 불면... ‘평화·공동성장’ 훈풍 솔솔,” 『경기일보』 2026. 1. 14.

8) 류호준, “원미희 강원도의원, 평화경제특구 공보 적극 대응 촉구,” 『연합뉴스』 2026. 4. 3.

## 제주의 새로운 대북협력 전략 ‘비타민C 외교’ 에서 ‘실용적 그린 데탕트’ 로

위와 같은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준비 상황에 비추어보면, 향후 남북협력 추진에 있어 제주의 위치는 오히려 선명해진다. 제주는 접경지역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비군사적 공간이자 세계자연유산과 국제 관광 역량을 동시에 갖춘 ‘세계 평화의 섬’ 이다. 이 점은 지금과 같은 경색 국면에서 큰 자산이 된다. 북한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협력의 ‘중심 플랫폼’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추진해야 할 대북 협력의 ‘기본 방향’ 과 실질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는 ‘협력 사업’ 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가. 기본 방향: ‘명분’ 에서 ‘실용’ 으로

- **‘한라-백두’ 용어의 전략적 사용:** 제주의 독보적 브랜드인 ‘한라-백두’ 표현은 민족적 동질성의 상징으로서 국내용 슬로건으로는 유지하되, 대북 및 국제 사회를 향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sup>9)</sup> 북한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삼지연 생태·관광’과 같은 중립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이 이를 ‘실무적 경제협력’으로 받아들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민족’이나 ‘통일’이라는 감성적 프레임보다는, 환경적 결합(유네스코 자연유산)과 ‘남북평화공존’, ‘지방 정부간 실용 협력’ 등 실용적 언어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 **제주만의 특화된 협력 자산 활용:** 세계자연유산 관리 노하우, 글로벌 관광 역량, 스마트팜 기술, 그리고 탄소없는 섬(CFI) 모델을 바탕으로 한 ‘그린 데탕트’ 에너지 협력 등 제주의 비정치적 자산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또한 제주는 접경지역이 아니며 ‘세계평화의 섬’이기에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상징성에도 가장 부합하다.

### 나. 협력 사업: 제주의 4대 핵심 협력 프로젝트 제안

제주의 남북협력은 당장의 실행보다는 치밀한 준비 단계 전략이 필수적이다.

#### 1) 제주 감귤 협력 2.0 (자립형 협력)

제주는 과거 2000년대 ‘비타민C 외교’로 불렸던 감귤 지원의 상징성을 계승하면서도, 현 정세에 맞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9) 고성준,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남북한 관계와 제주의 남북협력,”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외교과 주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기조 강연문(2026. 3. 4.), pp. 27-28.

- **농축액 및 가공 기술 제공:** 현재 북한이 수입하는 값싼 저가의 중국산 엑기스 와 인공 착향료는 산동성과 광둥성 인근의 식품 첨가물 공장에서 나오며 풍미와 영양질이 낮다. 반면에 제주산 천연 농축액은 영양이 풍부하여 이를 공급하여 각 지방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맛있는 고품향 주스, 비스킷, 사탕, 젤리키스테라, 케이크 등을 만드는 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 **묘목 및 스마트팜 기술 지원:** 북한 김정은의 ‘주민 먹거리 해결’ 과 지방발전의 핵심 치적으로 2025년 말 완공한 신의주 대형 온실농장은 고질적 에너지 한계와 기술력 부족으로 현재 채소와 도마도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 이 농장 일부에 ‘제주-신의주 협력 감귤 온실’을 설치하고, 추위에 강한 묘목과 함께 제주형 ‘스마트팜 관제 시스템과 고단열 연동 온실 기술’ 을 전수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감귤은 삼지연 호텔 등에 관광용 식재료로 공급되고 나아가 주민들의 과일로 판매될 수 있어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가 될 것이다. 신의주 온실농장에서의 제주 감귤 재배 자립화가 성과를 거두면 평양강동종합온실농장을 비롯 다른 지역의 대형온실농장으로 제주감귤 재배가 확산될 수 있다.
- **공동 브랜드 상품화:** 제주의 브랜드와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공동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 2) ‘백두산-한라산 세계자연유산 공동 관리’ 구상

한라산과 백두산은 단순히 자연이 아니라 한반도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생태 자산이다. 제주는 이미 세계 자연유산 관리 경험과 재인증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를 백두산 일대에 적용하는 ‘백두산-한라산 세계자연 유산 공동 관리’ 구상은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생태 보전과 관광을 결합한 이 협력은 북한에 실질적 이익을 제고한다. 삼지연 일대를 지속 가능한 국제적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관리 기술과 운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제주(글로벌 관광 역량)-삼지연 (국제관광 활성화) 협력

-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전수:** 9차 당대회의 흥미로운 점 하나는 관광의 지위 격상이다. 관광을 단순 외화 획득 수단이 아닌 ‘경제 성장과 문명 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사업’ 으로 규정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sup>10)</sup> 이는 관광을 산업화하여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관광산업을 통한 외화 확보에 사활을 걸고 원산-갈마 관광지구와 함께 이미 백두산을 삼지연 관광지구로 격상시켜 지난해 말 이끼호텔을 비롯 5개의 국제수준급호텔 준공식에 직접 참석하였다. 그럼에도 하드웨어 인프라

10) 정은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분석(5): 경제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6-16(통일연구원, 2026. 2. 27). p. 5.

를 확충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와 인적 역량이 부족합니다. 제주의 고도화된 호텔 운영 기법, 예약 시스템, 관광 서비스 노하우, 조리법 등 K-서비스 전수는 삼지연의 호텔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삼지연에 에너지 절감형 온실을 구축하여 감귤 묘목 및 농축액을 활용한 웰컴 드링크/ 디지털 개발을 하여 호텔에 공급하는 스마트팜 협력과 삼지연시의 고질적인 전력과 난방 문제 해결에 제주형 탄소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노하우를 적용한다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청정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의미가 클 것이다.

#### 4) 평양 전기차 엑스포와 에너지 평화 벨트

제주가 본부인 세계전기차협의회는 2027년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다.<sup>11)</sup>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 인정 받고 싶어한다는 갈망을 내포한다. 이 지점에서 제주의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노하우는 북한의 고질적인 전력과 난방난 해결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북한을 국제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며 배터리,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가 결합한 종합 산업 플랫폼이다. 민간 주도이면서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2027 평양 엑스포 프로젝트를 제주가 연계하여 남북 그린 데탕트 협력의 기회로 만들어 간다면 제주는 ‘평화의 섬’에서 ‘그린 데탕트’의 발신지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제주를 동북아 친환경 모빌리티의 허브로 각인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기후 위기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를 매개로 북한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북한 여러 지역에 에너지-환경-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이전할 수 있다면 북한 당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북 제재 환경과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이다. 이를 민간 주도의 국제적 거버넌스 즉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접근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가 세계전기차협회와 엑스포 성공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협력을 하여 전기차라는 화두로 평양의 문을 열고 한반도에 ‘그린 데탕트’의 봄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다.

11)김창우, “한라에서 백두, 그리고 세계로 평양 전기차 엑스포 밑그림은?” 『제주의 소리』 2026. 3. 25.

##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2.0’ 시대를 향하여

이제 제주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의 감귤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귤 협력 2.0’으로 진화시키고, 환경·에너지·관광·모빌리티를 결합한 복합 협력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제주는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협력의 플랫폼이자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교류의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교류 재개를 대비한 ‘준비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다.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델을 갖고 있는지가 미래 남북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접경지역이 물리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주는 내용과 방식의 혁신으로 승부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막힐수록 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린다. 제주는 감귤의 섬을 넘어 환경과 산업 협력의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제주는 여전히 ‘가장 먼저 열릴 수 있는 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 세운 실용적이고 담대한 전략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제주는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2000년대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과거의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승과 보완 작업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2.0> 계획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우선 비전과 단기, 중장기 추진계획이 담긴 신남북교류협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앞서 제시된 감귤 패키지, 스마트 온실, 백두산-한라산 자연유산 공동 관리, 그린 데탕트 등 적실성 있는 시범 사업들을 발굴하여 제안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와 중앙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며, 남북간 직접 대화와 협력이 어렵다면 국제기구, NGO 등과 연계된 추진 전략도 중요하다. 중국 등 제3국 소재의 접촉 채널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의 차별화된 구상과 노력이 북한 측에 명확히 각인될 수 있도록 치밀한 홍보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추진 인프라로 전문 인력 양성과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는 한편, ‘가상 한라-백두 탐방’이나 ‘소통 공감 아카데미’ 등 도민 참여형 평화 공감 사업을 전개하여 도민 사회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도 필수적이다.



### 저자 소개: 고성준

現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이다.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와 평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00년대 감귤북한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부이사장을 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 “평화의 감귤, 1999-2010” (공저, 2011), “통일 한국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 (공저, 2016),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 (공저, 2018), “MZ세대에게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공저, 2022) 등이 있다.

2026년 4월

저작권자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